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와 군사갈등 관계*

오종문(연세대학교 통일클러스터센터 연구위원)

논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다자협력제도는 대상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됐다.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인 갈등도 다자협력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연구결과 다자협력제도 중 ARF만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ARF 참가 시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낮은 것은 정치·안보 등에 대한 정부 간 대화를 다른 대화들 보다 중요하게 여겨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자협력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군사적인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북한, 다자협력제도, 군사갈등, 평화, 안보

* 본 논문은 2021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 MZ 세대가 바라보는 북한-통일 분야의 제 문제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해서 작성했습니다.

I. 서론

동북아시아는 군사적인 긴장과 불안, 상호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에도 전운의 위기를 드리웠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보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군사적인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군사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자협력제도는 대상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 됐다. 북한의 군사도발도 다자협력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자협력제도는 군사적인 갈등을 논의할 수 대화의 장이지만,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지역단위의 제도에만 한정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협력제도의 필요성은 첫째, 한반도 평화 체제수립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역적, 다자간 접근을 활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동북아시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 정치·군사 적인 대립관계로 나뉘어져 신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다자협력제도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군비경쟁을 바탕으로 한 세력경쟁으로 안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해야 한다.¹⁾ 이렇게 다자협력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에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김정은은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1) 유영욱,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와 정치사상』, 서울: 홍익재, 2006, p. 163.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통한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기 원한다면 다자협력제도의 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자협력제도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군사적인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연구방법은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와 군사갈등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다자협력제도는 북한이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다자안보협력제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 국가는 북한을 제외한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한정한다. 연구시기는 북한이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한 199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다. 다자협력제도 변수의 기간 중 ARF와 CSCAP는 1994년부터 시작됐고 NEACD는 1993년부터 시작해 연구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ARF와 CSCAP의 개최년도인 1994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II. 다자협력제도 이론과 선행연구

1. 다자협력제도 개념과 이론

다자주의는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특정한 협정이나 제도에 의해서 국가 정책들을 조정해 나가는 관행”²⁾이다. 다자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형식으로 국제관계에서 협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

2) Keohane, Robert O.,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Canada's Journal of Global Policy Analysis*, Vol. 45, No. 4, 1990, p. 173.

용한다. 다자주의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의미는 협력주체의 다양화와 협력체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복잡한 경쟁과 충돌성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안정적·장기적이며 제어 가능한 협력 프로그램을 형성해 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제도적·습관적으로 협력하게 하는데 있다.³⁾

국가들이 다자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요인은 첫째, 어떤 주제를 논의하는가. 둘째, 누가 참여하는가가 의사결정의 핵심이다.⁴⁾ 다자협력제도는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다자협의체에서는 국가별 역할과 발언력에 따라 다자협력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자협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느슨하나마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⁵⁾ 코헤인은 미국은 9·11테러를 통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국가와 주요 지역적 혹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서 반테러 연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국가 간에 이익이 다르고 복잡하지만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자협력제도에 관한 논리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80년대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자유주의 중에서도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파이다.⁷⁾ 이러한 제도주의는 “자유주의적 원칙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제도(공식 또는 비공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제시한다.⁸⁾

신자유적 제도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기구들은 행위의 자율성이 제도

3) 주평 지음, 이상원 옮김,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성남: 북코리아, 2014, p. 405.

4) 이성우, “동아시아 다자공동체 구상의 현실적 장애와 대안: 동아시아 다자협력체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9권 3호, 2011, pp. 127~128.

5) 이상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성남: 세종연구소, 2006, pp. 6~7.

6) Keohane, Robert O., “The public delegitimation of terrorism and Coalitional Politics.” In K. Booth and T. Dunne eds., *Worlds in Collision: Terror and the Future of Global Order*. London: Palgrave Macmillan, pp.141-151.;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 지음,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p. 159 재인용.

7) 안문석, 『글로벌 정치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 54.

8) Andrew Heywood 지음, 김계동 옮김,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7, p. 70.

의 영향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가정한다.⁹⁾ 국가들마다 자국의 안보와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란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협력의 발생을 촉진시키고 지속시킨다고 생각한다.¹⁰⁾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관계와 상호의존관계를 관찰하면서 국가이익이 어떻게 학습되고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나 관습 같은 제도의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주권국가들의 야망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외부적’ 기제는 국제기구라고 믿고 있다. 국가들 간에 점증하는 협력과 통합을 기능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했다.¹¹⁾ 국제기구가 집단안보와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국제체제를 설립하기를 기대했다.

다자협력제도는 자유주의적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간에 다양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안보 협력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안보를 위한 협력도 국가별 이익에 따라 형성되는 가운데 자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제도와 협의체를 주도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현상도 나타난다. 菊池努(Tsutomu Kikuchi)는 “국제제도의 활용은 현실주의적인 움직임이다.”¹²⁾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관계의 산물인 제도가 결국은 현실주의적 원리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협력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동북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경제발전의 차이, 정치와 경제체제의 이원화 그리고 다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 패권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며 다양화된 문화와 전통에서 발생하는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족과 종교적인 문제

9) Keohane, Robert 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1989, p. 163.

10) 조운영, “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 해석: 한국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와의 함의.” 『新亞細亞』 14권 2호, 2007, pp. 63~89.

11) Andrew Heywood 지음, 김계동 옮김,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7, p. 70.

12) 菊池努, “東アジア新秩序の展望: リベラリズムの見方.” 『国際問題』 No. 623, 2013, pp. 37~41.

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¹³⁾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안보와 협력에 대한 논의도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다자협력제도 참여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제도의 대부분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주로 주도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다자협력제도의 활동 방향과 목적, 이념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자협력제도를 구성하면서 북한 문제만을 핵심 의제로 다루는 등 북한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자협력제도에서 북한의 탈퇴를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다자협력제도가 국가 간의 이익 차이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타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 다자주의를 위한 협력은 국가들 간의 외교적인 이익이 상충하고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바탕이 되어야 다자협력제도가 유지되고 지속 될 수 있다. 국익(National Interest)과 국제협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자협력제도는 지역의 안보를 위한 국가 간 대화로 군사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과정에 보다 용이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면서 통일 후를 대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증대할 수 있다.¹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유리한 지역안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3) 주평,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p. 177.

14) 유영욱,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와 정치사상』, p. 163.

2. 다자협력제도 선행연구

다자협력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형태를 가진다. 첫째는 6자회담과 관련한 연구, 둘째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안보협력회의와 비교 연구, 셋째는 강대국의 다자주의의 참여 연구가 있다. 북한과 동북아시아와 관련된 다자협력제도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대부분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한 연구로 임을출(2009)¹⁵⁾은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제기한다. 북한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참여는 체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고 민주주의 진영과의 교류협력은 서구적 근대화를 촉진,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운영(2007)¹⁶⁾은 유엔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분단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문제 또한 험난한 노정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난제를 푸는데 6자회담을 통한 지역적 다자협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제시한다. 박성화(2006)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자안보협력이 어렵다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¹⁷⁾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7년을 마지막으로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자협력제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

6자회담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자안보협력을 유럽과 비교한 정한범(2017)¹⁸⁾은 동북아시아에 다양한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유럽안보협력기

15) 임을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6) 조운영, “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 해석: 한국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에의 함의.”.

17) 박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2권 2호, 2006.

18) Jeong, Hanbeom, “Prospect of Multilater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세계지역연구논총』 35

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자안보 협력을 위해서 이슈 영역, 지리적 범주를 포괄적으로 한다면 협상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서보혁(2009)¹⁹⁾은 역내 공동변영과 평화는 지역에서의 국제질서 현상유지 속에서 추구할 수 있으며, 안보협력 구축을 위해서 정부기구와 1.5트랙 및 비정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C/OSCE)의 경험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 설립에 큰 교훈을 주지만 이 지역만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역내 국가간 관계를 반영하여 적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2002)²⁰⁾은 다자안보협력은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지역의 다자안보협력 틀을 동아시아에 적용하려 하기 보다는 동아시아만의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해 더 나은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구축이 필수적이며 협력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이 수용되고 제도화된다면 이 지역의 안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최종건(2009)²¹⁾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과 같은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다자협력질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은 이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투영해 제도의 비공식성, 협력 협안의 구체성, 행위자의 다양성을 통해 진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실증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다자협력질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드문 가운데, 코르베타와 디슨(Corbetta and Dixon)은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한 주요 강대국이 국가 간 분쟁(MI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집 3호, 2017.

19) 서보혁,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49집 2호, 2009.

20) 김정일,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유럽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0집 2호, 2002.

21) 최종건,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4호, 2009.

통해서 분석했다. 강대국은 다자주의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힘과 권력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논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강대국은 직·간접적으로 힘과 권력을 활용해 분쟁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²²⁾ 강대국들은 전략적, 경제적으로 이해관계에 더 얽혀 있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국제 분쟁에 관여하는 경향이 크다.²³⁾ 강대국은 다자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들 간의 대화가 촉진되면 전 지구적으로 안보가 증대된다.²⁴⁾ 국가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 강대국의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갈등을 안보에 대한 협력으로 이끌 수 있다. 유현석(2007)²⁵⁾은 강대국이 가진 패권을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안보체도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다자안보협력체를 공급할 동기는 비용과 수익 면에서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가 다자안보체도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들마다 이해관계가 상이해서 지역안보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자협력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첫째, 6자회담을 통해 다자적 제도화와 지역적 다자협력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과 비교하면서 역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자협력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강대국이 다자협력제도에서도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자국의 유리한 안보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문은 첫째,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ARF,

22) Corbetta, Renato and William J. Dixon, "Multilateralism, Major Powers, and Militarized Dispu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57, No.1, 2004.

23) Siverson, Randolph M. and Harvey Starr, "Opportunity, Willingness, and the Diffusion of Conflict." *American Science Review*, Vol. 84, 1990.

24) Lawler, Peter, "The Core Assumptions and Presumptions of "Cooperative Security". In S.Lawson eds., *The New Agenda of Global Security: Cooperating for peace and Beyond*, St Leonards: Allen & Unwin, 1995, pp. 56~57.

25) 유현석,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의 모색: 다자안보협력, 지역기구, 지구시민사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3호, 2007.

NEACD, CSCAP를 통해서 안보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대상에서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력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보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둘째,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력제도가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양적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는 데 있다. 대부분의 북한과 관련된 연구는 질적연구만 이루어졌으며 다자협력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

Ⅲ. 다자협력제도와 군사갈등 연구 설계

1. 다자협력제도와 군사갈등 모형 설정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모형에서 다자협력제도는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 다자협력제도는 정치·안보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 국가 간에 군사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인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부록〉을 보면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남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이 다자협력제도에 함께 참여한 제도의 수는 3개이다.²⁶⁾ 동북아시아에서 다자협력제도의 참여 수준은 낮은 상태에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ARF 그리고 민간대화체로서는 CSCAP만 존재하며 동북아시아에서는 NEACD가 반민간대화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²⁷⁾

26)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각자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제도의 수는 약 27개 정도 된다.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제도는 3개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부록〉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제도 가입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27) 유현석,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의 모색: 다자안보협력, 지역기구, 지구시민사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p. 46.

다자협력제도는 정부 관계자의 참여에 따라 참가 Track을 구분한다. 정부와 민간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Track이 나뉜다. 정부 간 협력체인 ARF는 Track-1, 정부+민간 협력제도인 NEACD는 Track-1.5, 민간협력제도 CSCAP는 Track-2로 구성되어 있다. Track의 순서에 따라 독립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통제변수는 국경, 외교관계, UN대북제재, 민주국가, 대외무역 변수를 선정하여 군사갈등에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다. 이에 따라 모형 (1)은 독립변수에 ARF를 투입하고 통제변수를 두면서 종속변수인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모형 (2)는 독립변수에 NEACD를 투입하고 통제변수를 두면서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모형 (3)은 독립변수에 CSCAP를 투입하고 통제변수를 두면서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모형 (4)는 독립변수인 ARF, NEACD, CSCAP를 동시에 투입하고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다자협력제도와 군사갈등에 미치는 기본적인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군사갈등}_{i,j,t} = & a + \beta_1 \text{다자협력제도}_{i,j,t} + \beta_2 \text{국경}_{i,j,t} + \beta_3 \text{외교관계}_{i,j,t} + \beta_4 \text{UN대북제재}_{i,t} \\ & + \beta_5 \text{민주주의 국가}_{i,j,t} + \beta_6 \text{Ln대외무역}_{i,j,t} + \epsilon_{i,j,t} \end{aligned}$$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군사갈등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과 관련된 군사적인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남한, 미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비 증강과 군사 훈련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안보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의 상관성(COW: Correlates Of War)에서는 군사갈등을 군사력을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1.군사 행동 없음(No militarized action) 2. 군사력 사용 위협(Threat to use force), 3. 군사력 전시(Display of force), 4. 군사력 사용(Use of force), 5. 전쟁(War)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 위협 이상의 수준은 군사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갈등이 COW 갈등 수준 2, 3, 4, 5에 속하면 1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입력한다.

군사갈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는 Dyadic MIDs and Dyadic Wars 4.0(28)을 사용하며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자료는 군사갈등과 관련된 단행본과 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합한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동북시아 주변국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만 COW에서는 잘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갈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집계한다.²⁹⁾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다자협력제도 자료는 ARF, NEACD, CSCAP의 홈페이지와 기사 등을 중심으로 취합한다. 다자협력제도 중에서 ARF는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도(Track-1)로 민간인도 참가하는 다른 제도보다 대화의 중요성과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은 정부의 권한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28) Dyadic MIDs and Dyadic Wars 4.0은 2014년도까지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Dyadic MIDs and Dyadic Wars 4.0,"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검색일: 2021년 6월 24일\)](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검색일: 2021년 6월 24일)).

29) 1994년부터 2014년도까지 북한의 핵과 관련된 내용은 COW의 MID Narratives 2002-2010의 분쟁번호 4455, 4463에서만 언급됐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내용 보다는 북핵 문제로 긴장이 조성되어 군사적인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 적혀있다. 참고로 COW의 코드북에서 핵 경보(Nuclear alert)의 군사적인 수준은 3으로 군사력 전시(Display of force)로 되어 있다.

특히 ARF는 북한의 외무 장관급이 참여하고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력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0.5씩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 중요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각 제도별 특징에 따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단순하게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했다고 1로 모두 기입하면 제도별 특성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연도에 위의 제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모두 동일한 값으로 처리되어 변별력이 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협력 제도인 CSCAP(Track-2)에 참가하면 1로, 정부+민간 협력제도인 NEACD(Track-1.5)에 참가하면 1.5, 정부 간 협력체인 ARF(Track-1)는 2로 입력한다. 반면에 북한이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0으로 입력한다.

3) 통제변수

북한이 군사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통제변수인 국경, 외교관계, UN대북 제재, 민주주의, 대외무역을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 변수들은 군사갈등의 증가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국경은 국가 간에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 정치적인 견해 차이와 군사적인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군사적인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한편 국경이 가까운 국가는 교류와 대화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사적인 갈등을 잠재우기도 한다. 국경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한, 중국, 러시아를 보더라도 이념에 따라 상이하다.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에 따라 군사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입력한다.

외교관계는 북한이 해외에 재외공관을 설치한 국가와는 외교적·정치적으로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군사적인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 외교관계 변수는 COW 외교 교환(Diplomatic Exchange data set)의 자료를 활용한다.³⁰⁾ 하지

만 COW 자료는 2004년까지만 제공하고 있어서 외교부³¹⁾와 기사의 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북한의 외교 관계 현황을 파악하여 입력한다. 이에 북한이 동북아시아 국가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고 파견하고 있으면 1로 입력을 하며, 아니면 0으로 입력한다.

UN대북제재는 북한이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서 안보리는 2006년 7월 15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결의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다. 경제제재는 적대적인 국가의 군사적인 행동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정책적인 도구로 사용된다.³²⁾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실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UN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의 수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1을 입력하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시행되면 1씩 증가시키며 구분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사적인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군사분쟁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다. 북한은 권위주의 국가로 민주적인 국가와는 이념과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변수가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입력한다.

대외무역은 IMF의 자료와 KITA의 자료를 취합하여 집계한다. IMF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역이 집계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나타나 있다. 이에 KITA에서 제공하는 남북교역액을 추가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을 취합한다. 그런데 남북교역은 2016년도 이후부터 중단된 상태에 있다. 실질적인 남북교역은

30) "Diplomatic Exchange."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diplomatic-exchange>(검색일: 2021년 6월 27일).

31) "재외공관설치현황."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4178/contents.do(검색일: 2021년 6월 27일).

32) Russett, Bruce and John R.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2001, pp. 114~115.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비상업적 거래(정부, 민간지원 등)로 인해 2017년에는 100만 달러, 2018년 2,100만 달러, 2019년에는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비상업적 거래도 교역액으로 추정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을 집계한 후 로그를 취하여 나타낸다.

IV. 다자협력제도와 군사갈등 변수 검정과 실증분석

1. 기초 통계와 변수 검정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변수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 통계를 실시했다. <표 1> 변수 기초 통계를 보면 ARF 변수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 평균은 1.48로 다른 다자협력제도 변수보다 평균값이 높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NEACD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5, 평균은 0.50인 반면에 CSCAP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은 1, 평균은 0.89로 CSCAP의 평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NEACD에 참가하는 횟수보다 CSCAP에 참가하는 횟수가 더 많아서 평균값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대외무역은 최소값이 -1.90, 최대값이 8.79로 나와 있는 이유는 로그를 취했기 때문이다. 대외무역이 0인 값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교역액을 기록한 곳은 북한과 미국과의 교역으로 2016년 15만 달러이며 가장 큰 교역액을 기록한 곳은 2013년 북한과 중국으로 6,59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중교역은 대북제재로 2018년도 이후부터 급감했어도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변수 기초 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군사갈등	0	1	0.59	0.49
ARF	0	2	1.48	0.88
NEACD	0	1.5	0.50	0.71
CSCAP	0	1	0.89	0.32
국경	0	1	0.60	0.49
외교관계	0	1	0.40	0.49
UN대북제재	0	12	3	3.80
민주주의	0	1	0.80	0.40
대외무역	-1.90	8.79	4.49	2.89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분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다중공선성, 그리고 이분산성 검사를 실시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이중에서 변수 간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국경과 대외관계 변수로 평균 0.681을 기록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한, 중국, 러시아의 교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 상관성이 크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경과 외교관계로 0.667을 기록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남한만 형성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표 2〉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 검정을 통해서 회귀계수의 분산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다중공선성(VIF) 검사에서는 모든 변수가 10 이하로 나타났다. 비록 국경 변수가 평균 3.2로 가장 높지만, 회귀계수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한편 변수에 잔차의 분산이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Breusch-Pagan/Cook-Weisberg 이분산성을 검정을 실시했다. 이분산성 검정은 귀무가설이 동분산을 가정하고 있는데, p값이 검정 기준 값인 0.05 이상이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즉,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 검정

검사	변수	군사갈등 (1)	군사갈등 (2)	군사갈등 (3)	군사갈등 (4)
VIF (다중공선성)	ARF	1.10			1.53
	NEACD		1.03		1.35
	CSCAP			1.76	1.95
	국경	3.22	3.20	3.21	3.22
	외교관계	2.64	2.63	2.63	2.64
	UN대북제재	1.32	1.22	1.88	2.37
	민주국가	2.05	2.05	2.05	2.05
	대외무역	2.81	2.78	2.79	2.82
	Mean VIF	2.19	2.15	2.39	2.24
Breusch-Pagan/ Cook-Weisberg (이분산성 검정)	Chi2	0.00	0.31	0.01	0.13
	prob > chi2	0.98	0.58	0.93	0.72

본 연구는 국가의 현상이나 특성이 시간 순으로 기록된 시계열데이터(time-series data)와 동북아시아 6개국의 현상이나 특성이 모여 있는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인 패널데이터(panel data)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시간적인 순서와 국가별 차이에 따라 오차항에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E), 고정효과(FE), 그리고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동 프로빗(pooled probit) 3개 모형을 비교했다. 하지만 확률효과와 고정효과는 Likelihood-ratio test of $\rho=0$ 의 검정결과, $\sigma^2_u = 1$ 이 나와 $\sigma^2_u = 0$ 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는 패널 개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동 로짓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널 프로빗에서도 검정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합동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³³⁾

33) 실증분석 결과에서 모형 (4)를 기준으로 패널 프로빗 분석 시 ARF($\beta=-0.3344$), NEACD($\beta=0.9274$), CSCAP($\beta=3.3215$)로 합동 프로빗 분석 시 ARF($\beta=-0.3345$), NEACD($\beta=0.9274$), CSCAP($\beta=3.3217$)로 모형의 변수 계수(β) 값만 다소 다르고 통계적인 결과는 유사하게 도출됐다.

2.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3> 다자협력제도가 군사갈등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ARF는 정부 간 협력체인 Track-1로 모형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형 (4)에서는 북한이 군사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형 (4)가 모형의 적합도와 다른 독립변수도 함께 넣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높다. 북한이 ARF 참여 시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낮은 것은 정치·안보 등에 대한 정부 간 대화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대화에 나서며 그 논의에 대한 존중으로 군사적인 갈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ARF는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로 남북 고위급 접촉 여부에 관심이 많았다. ARF를 통해서 북한도 안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유럽연합(EU) 등 총 27개국이 참석한다. 남한은 ARF 창설회원국으로 1994년 제1차 외교장관회의부터 참석해 왔으며, 북한은 2000년 7월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외무상급 인사들을 꾸준히 참석시켜 국제사회와의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ARF에 외무상이나 외무성 본부 국장 등을 참석시켜 북핵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2019년 이후로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들어 외무상이 불참했다. 대신에 2019년은 ARF 의장국(태국) 주재 북한 대사였던 김제봉 대사가 참석했으며, 2022년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ARF 회의에 보냈다. 이 회의에서 박진 외무부 장관과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인사를 나누면서 잠시라도 대화를 주고받았다. 남북한 간에 교류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ARF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RF에 북한은 2019년부터 외무부 장관을 보내지 않고 대사를 보내면서 군

사적인 행동은 과감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점차 증가했다. 남북한은 2021년 9월 16일 같은 날에 서로 몇 시간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양국은 2021년 9월 19일 군사합의 3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전략 증강 경쟁을 펼치며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2022년에도 남북한 간에 군사적인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은 더욱 담대해지고 있다.

다자협력제도 변수 중 NEACD는 정부+민간 협력체인 Track-1.5이며 CSCAP는 민간협력체인 Track-2로 모형 (2) ~ (4) 에서 군사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분야로 구성된 다자협력제도에 참가할수록 북한이 군사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북한은 정부 간 협력체와의 대화를 보다 중요시 여기며 참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군사적인 갈등을 감소시키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특성상 민간의 영역도 정부의 통제와 지휘 하에서 움직인다. NEACD와 CSCAP는 민간도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책에 개입한다. 북한은 NEACD와 CSCAP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ARF보다는 그 중요성을 낮게 여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으로 NEACD와 CSCAP에서 다른 역내 국가들과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북한의 NEACD와 CSCAP 참여는 군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NEACD와 CSCAP의 참여가 군사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두 다자협력제도는 국가 간에 안보와 정치적인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다. NEACD는 199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미국 국무부 지원으로 설립한 동북아시아지역만을 위한 유일한 비정부차원 다자안보협력 대화체이다. NEACD에는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학자, 정부 고위 실무자 및 현역 군인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부 간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제도이다.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제가 문제점인 동시에 해결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³⁴⁾ NEACD는 지역의 군사 갈등 위험을 줄이고 동북아시아의 공식 다자간 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⁵⁾

북한은 NEACD에 1993년 7월 준비회의(미국 샌디에고) 참가 이후 제 1~12차 회의에 계속 불참하였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2016년 최섉희 외무성 제1부상의 참석을 끝으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이번 NEACD에 불참하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도 대표단의 급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³⁶⁾

CSCA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문제에 관해 각국이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는 비정부차원 Track-2의 협의체이다. 지난 1994년 남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13개국 연구기관과 고급 관료가 참여해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정부 간 기구에 정책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지역 및 국제회의를 소집하며, 지역 정치 안보 협력 분야에서 정보, 통찰력 및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기관 및 조직과의 연계를 수립한다.³⁷⁾ 비록 민간차원에서 활동하지만,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 Track-1의 안보협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국가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³⁸⁾

두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Track-1 보다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기에는 정책적인

34) 이상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pp. 7~9.

35)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IGCC』, <https://igcc.ucsd.edu/policy/northeast-asia> (검색일: 2021년 6월 25일).

36) "6자회담국 '1.5트랙 대화 NEACD 내주 홍콩 개최...北은 불참." 『연합뉴스』 2019년 6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078151504>(검색일: 2021년 6월 18일).

37) "Welcome to CSCAP." 『CSCAP』, <http://www.cscap.org/>(검색일: 2021년 6월 18일).

38) "CSCAP 북태평양 작업반회의 개최."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2552(검색일: 2021년 6월 17일).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쉽지 않다. 다자협력제도에 참가하고 있지만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동북아시아는 안보협력의 제도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RF는 광범위한 참가국과 참가국간 균등성, 의제의 포괄성, 지속성, 점진주의적 접근 등을 근거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서 낮은 수준의 안보협력 제도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유럽안보협력체제의 초기 경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ARF는 6자회담보다 지역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³⁹⁾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통제변수 중에서 외교관계는 모형 (1)에서부터 모형 (4)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형성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로 북한과 자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정부 관계자끼리 상시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가들 간에 대사관과 영사 등 외교적인 관계가 형성된 국가와는 군사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북한과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인 남한, 미국, 일본과는 군사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 업무와 대사와 영사를 통해서 북한 정부 당국자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 군사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UN대북제재는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UN대북제재의 기초통계를 보면 최소값 0에서부터 최대값 12까지 증가했는데, 특히 2016년도 이후부터 제재의 강도가 빠르게 증가해서 12까지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군사적인 갈등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제재에 대한 UN안

39) 서보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pp. 22~23.

보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UN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면서도 군사적인 갈등은 억제시키지 못하면서 유용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평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실험 중단과 같은 조건은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 등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회담에서 협상과 양보, 그리고 협력규칙 형성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⁴⁰⁾고 주장한다.

연구의 대상 국가인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여한 나라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자회담을 개최했다. 6자회담은 2003년 처음 시작해 2007년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영변 핵사찰에 대한 갈등과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서 회담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UN제재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UN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만 양산시키고 2007년 이후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UN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을 논의하기 보다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모형 (1)과 (3)에서는 군사갈등을 감소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형 (4)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을 감소시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4)가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모형보다 높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변수가 북한의 군사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교역관계를 증진시키고 군사갈등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킨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민주주의의 국가들이 군사적인 갈등을 표출하기 보다는 남한, 미국, 일본이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을 낮추고 있다.

권위주의국가와 민주주의국가는 서로 다른 외교정책의 형태를 보인다. 권위

40) 주평,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pp. 407~408.

주의국가에서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도자 개인 판단에 의해서 외교정책이 수립된다. 반면에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시민사회가 발전해 있어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러 사회세력의 요구에 민감하다. 민주주의국가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고 국제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민주주의국가는 타협을 중시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이 정책 수행에 관여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⁴¹⁾

북한은 국경을 접하는 국가와 군사적인 갈등을 높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국가 사이의 국경은 외교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자 중에는 타국과 공유한 국경이 많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지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경으로 인한 국가간 근접성이 분쟁의 촉매제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미국보다 접경 및 근접 국경이 많아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⁴²⁾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면서도 가장 근거리에 있는 국가는 남한이다. 남한은 북한과 군사적인 갈등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남한과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두고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으며, 한반도 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군사적인 갈등이 가장 높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두 국가와는 정치적·군사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인 갈등은 거의 없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도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는 자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외무역은 북한의 군사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북한과 일본 간의 교역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는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미국과 남한과의 교역은 인도적인

41) 김계동 외 17명,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21, pp. 35~36.

42) 벨러리 허드슨 지음, 신옥화·최동주·조운영·김재천 옮김,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p. 248.

지원이 북한의 반입액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 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정체가 되어 있는 관계를 풀어나가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북한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도 급감했다. 북한은 UN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교역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은 군사갈등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잦아지고 있어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표 3〉 다자협력제도가 군사갈등에 미친 영향 분석(1994~2020)

변수	군사갈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ARF	0.23 (0.15)			-0.34 [*] (0.20)
NEACD		0.75 ^{***} (0.21)		0.93 ^{***} (0.27)
CSCAP			2.93 ^{***} (0.78)	3.32 ^{***} (0.94)
국경	0.12 (0.46)	0.17 (0.47)	0.32 (0.47)	0.40 (0.48)
외교관계	-1.95 ^{***} (0.44)	-2.19 ^{***} (0.47)	-2.39 ^{***} (0.51)	-2.79 ^{***} (0.58)
UN대북제재	0.05 (0.04)	0.09 ^{**} (0.04)	0.26 ^{***} (0.07)	0.35 ^{***} (0.10)
민주주의	-0.46 (0.43)	-0.54 (0.46)	-0.77 (0.49)	-0.96 [*] (0.55)
Ln대외무역	0.06 (0.07)	0.05 (0.07)	0.01 (0.07)	0.004 (0.079)
상수	0.57 (0.59)	0.59 (0.60)	-1.75 [*] (0.89)	-1.95 ^{**} (0.99)
LR chi sq.	46.14	58.49	63.25	77.25
Pseudo R sq.	0.25	0.32	0.35	0.4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이며, * 은 10%, ** 은 5%, *** 은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4〉 다자협력제도가 군사갈등에 미친 영향 한계효과 분석(1994~2020)은 군사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고 군사갈등 발생 확률의 증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북한의 군사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교관계이다.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외교관계 한계효과는 모형(1)에서부터 모형(4)까지 -0.67에서 -0.83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다른 조건이 평균(독립변수 모두 해당)에 있고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연수가 1년 증가할 경우에 군사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67%에서 -83%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갈등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표 4〉 다자협력제도가 군사갈등에 미친 영향 한계효과 분석(1994~2020)

변수	군사갈등 한계효과			
	(1)	(2)	(3)	(4)
ARF	0.09 (0.06)			-0.12* (0.07)
NEACD		0.29*** (0.08)		0.34*** (0.10)
CSCAP			0.73*** (0.07)	0.77*** (0.07)
국경	0.05 (0.18)	0.06 (0.18)	0.12 (0.18)	0.15 (0.18)
외교관계	-0.67*** (0.11)	-0.72*** (0.10)	-0.77*** (0.10)	-0.83*** (0.09)
UN대북제재	0.02 (0.01)	0.04** (0.01)	0.10*** (0.03)	0.13*** (0.03)
민주주의	-0.17 (0.15)	-0.19 (0.15)	-0.26* (0.14)	-0.30** (0.14)
Ln대외무역	0.02 (0.03)	0.02 (0.02)	0.005 (0.029)	0.001 (0.029)
predict	0.60	0.61	0.63	0.55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이며,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을 나타냄

북한의 ARF 한계효과는 모형 (1)에서는 0.09로 추정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형 (4)에서 다른 다자협력제도 변수를 함께 넣고 분석했을 때, 북한의 ARF 한계효과는 -0.12로 추정됐다. 이는 ARF에 참가하는 연수가 1년 증가하면 군사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12%씩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F는 정부의 주요 관계자를 파견해 다자안보협의를 나누는 참가 Track-1로 다자협력제도의 구성과 정부 주요 관계자의 참여가 북한이 군사적인 갈등을 일으킬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다자협력제도 변수인 NEACD와 CSCAP는 한계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Track-1.5인 NEACD는 북한이 군사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모형(2)에서는 29%, 모형(4)에서는 3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Track-2인 CSCAP는 모형(3)에서는 73%, 모형(4)에서는 77%로 높아졌다. 다자협력제도의 참가 Track이 민간 영역으로 확장 될수록 북한이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UN대북제재도 북한의 군사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계효과 분석 결과 모형 (1)을 제외하고 모형 (2)~(4)에서 0.04에서 0.13 수준으로 증가했다. UN대북제재의 강도가 평균에서(평균값은 3, 최대값은 12) 1씩 증가할 경우에 군사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4%에서 13%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제재는 북한의 군사갈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은 탄도에서 순항, 극초음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면서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과시했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증가할수록 남한도 군사적인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갈등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에도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안보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다자협력제도는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됐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인 갈등도 다자협력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력제도인 ARF, NEACD, CSCAP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다자협력제도 중 ARF만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ARF 참가 시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낮은 것은 군사안보 등에 대한 정부 간 대화를 다른 제도보다 중시해서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ARF를 통해 형성된 안보와 협력을 위한 국가 간에 대화가 군사적인 행위로 인해 무위(無爲)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ARF는 각 국가별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Track-1로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이다. 북한의 정부 관계자는 2000년도부터 회의에 매년마다 참가하고 있다.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가 촉진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다자협력제도 관련 변수 중 북한의 NEACD와 CSCAP의 참여는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EACD는 정부+민간 협력체인 Track-1.5, CSCAP는 민간협력체인 Track-2로 구분된다. 두 협력체에 참가하는 비중은 ARF에 비하면 적고 민간도 대화에 참여여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비록 북한의 NEACD와 CSCAP 참여가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북한에서도 두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화 복귀를 위해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력제도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EACD와 CSCAP는 민간이 참여해

서 북한 정부에서도 대화의 참여 의지가 낮지만, 민간적인 차원에서 아래에서부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자협력제도를 통해서 상호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이면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다자협력제도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거나 제도에 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 중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인 갈등을 일으킨다고 다자협력제도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안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다자협력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다자협력제도가 다수의 힘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원래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에서 본 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와 이해가 상이하지만 다자협력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군사적인 갈등은 줄어들고 협력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다자협력제도와 군사갈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갈등을 낮추는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자안보협의체가 열리는 시기와 북미, 남북 간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의 전후, 또는 진행 중인 시기와 겹치지 않았는지 또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상황은 없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자협력제도와 군사갈등 관계를 양적으로 분석하려 하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질적연구로 보완된다면 북한이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 다자협력제도에 참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순수하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

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단계적 완화라든지 안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가상적인 공간을 통해서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비대면 공간에서의 대화 공간은 대화의 채널을 더욱 다양화 시킬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7월 13일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적 국별 검토(VNR: Voluntary Nation Review)’를 위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국가와 개인들 간의 만남을 저해했지만 메타버스와 화상회의에서의 대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공간으로 아바타로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에서 기존의 틀과 형식을 벗어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이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자협력제도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회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북한의 참여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부록〉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제도 가입 현황

다자협력제도		남	북	중	일	미	러	Track
ARF	아세안지역포럼	0	0	0	0	0	0	1
ACD	아시아협력대화	0		0	0		0	1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0		0	0	0	0	1
APT	아세안+한중일	0		0	0			1
GII	광역두만강계획	0	0	0			0	1
TEMM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0		0	0			1
NEACD	동북아협력대화	0	0	0	0	0	0	1.5
CSCAP	아·태안보협력회의	0	0	0	0	0	0	2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0			0	0		1
TCOG	한·일·미대북정책조정감독	0			0	0		1
TSC	한·일·미 안보위원회	0			0	0		1
SCO	상하이협력기구			0			0	1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0		0			0	1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0	0		1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	0		0	0	0	0	1
RECP	동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	0		0	0			1
ADMM+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0		0	0	0	0	1
반동회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		0	0	0			1
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0		0	0		0	1
한중일3국	한중일 3국협력회의	0		0	0			1
NEADB	동북아개발은행							1
ACD	아시아협력대화	0						1
FEALAC	동아시아·라틴협력포럼	0		0	0			1
CICA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0		0				1
G20	주요20개국 정상·재무	0		0	0	0	0	1
UNESCA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0		0	0		0	1

참고문헌

- 김경일,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유럽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0집 2호, 2002.
- 김계동 외 17명, 『현대의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21.
- 김정봉,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이 북한 등 주변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자유민주연구』 제 5권, 2011.
- 박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2권 2호, 2006.
- 벨러리 허드슨 지음, 신옥하·최동주·조운영·김재천 옮김,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서보혁,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49집 2호, 2009.
- 안문석, 『글로벌 정치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 유영옥,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와 정치사상』, 서울: 홍익재, 2006.
- 유현식,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의 모색: 다자안보협력, 지역기구, 지구 시민사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3호, 2007.
- 이상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성남: 세종연구소, 2006.
- 이성우, “동아시아 다자공동체 구상의 현실적 장애와 대안: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9권 3호, 2011.
- 임을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 조운영, “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 해석: 한국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와의 함의.” 『新亞細亞』 14권 2호, 2007.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 지음,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주평 지음, 이상원 옮김,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성남: 북코리아, 2014.
- 최종건,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4호, 2009.
- Andrew Heywood 지음, 김계동 옮김,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7.
- Corbetta, Renato and William J. Dixon, “Multilateralism, Major Powers, and Militarized Dispu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7, No. 1, 2004.
- Jeong, Hanbeom, “Prospect of Multilater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세계지역연구논총』 35집 3호, 2017.
- Keohane, Robert 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1989.

- Keohane, Robert O.,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No. 4, 1990.
- Lawler, L., "The Core Assumptions and Presumptions of "Coop-erative Security"." In S.Lawson eds., *The New Agenda of Global Security: Cooperating for Peace and Beyond*, St Leonards: Allen & Unwin, 1995.
- Russett, Bruce and John R.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2001.
- Siverson, Randolph M., and Harvey Starr, "Opportunity, Willingness, and the Diffusion of Conflict." *American Science Review* Vol. 84, 1990.
- 菊池努, "東アジア新秩序の展望: リベラルズムの見方." 『国際問題』 No. 623, 2013.
- "재외공관설치현황."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4178/contents.do(검색일: 2021년 6월 27일).
- "6자회담국 '1.5트랙 대화' NEACD 내주 홍콩 개최...北은 불참." 『연합뉴스』 2019년 6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078151504>(검색일: 2021년 6월 18일).
- "CSCAP 북태평양 작업반회의 개최."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2552(검색일: 2021년 6월 17일).
- "Diplomatic Exchange."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diplomatic-exchange>(검색일: 2021년 6월 27일).
- "Dyadic MIDs and Dyadic Wars 4.01."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검색일: 2021년 6월 24일).
-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IGCC』, <https://igcc.ucsd.edu/policy/northeast-asia-cooperation.html#History-and-Objectives> (검색일: 2021년 6월 25일).
- "Welcome to CSCAP." 『CSCAP』, <http://www.cscap.org/>(검색일: 2021년 6월 18일).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and Military Conflict

Jong Moon Oh(Research Fellow, Yonsei University Unification Cluster Cent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on military conflict.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s a way to discuss and cooperate on security issues between countries in the target region. Military conflicts occurring on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discussed and 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e study confirmed that only ARF among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reduces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in North Korea. North Korea's low probability of military conflict when it participates in the ARF seems to be trying not to cause military conflict by considering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politics and security more important than other dialog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manage military conflicts and increase the level of cooperation by participating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Keywords: North Kore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Military Conflict, Peace, Security

투고일: 2022년 11월 04일, 심사일: 2022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9일